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남현주 의원 등 10명(권숙자, 박정환, 이선주, 박왕규, 이진환, 도하석, 강한곤, 장호섭, 김정희)
- 발의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상정 및 의결: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 7. 19.)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 나.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명시(안 제4조)
- 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3. 7. 7. ~ 2023. 7. 17.)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운행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 12월 현재 달서구의 등록장애인은 28,435명으로 대구시 등록장애인의 2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21년 9월까지 대구시 전동보조기기 지원은 4,034대(전동휠체어 1,421대, 전동스쿠터 2,613대)로 행정기관 1,829대 중 달서구 577대로 31.55%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전국	2,652,860	983,928	1,668,932
대구광역시	127,611	46,310	81,301
달서구	28,435	10,728	17,707

출처: KOSIS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수

대구시 전동보조기기 지원 현황(2016년에서 2021년 9월까지)

구분	행정기관								그외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지방 보훈청	건강보험 공단
현황	60	244	111	131	235	325	577	146	42	2163

출처: 대구시 자료

- 이처럼 전동보조기기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용환경은 열악하여 도로교통공단(2023년 4월 20일)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4명 중 3명이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경험하는 등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2022년 12월 현재 대구시 공공기관 등 169개소와 지하철역 91개소 등 모두 260개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달서구는 관내 공공기관 등 17개소와 지하철 1호선 7개소, 2호선 10개소 등 모두 34개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

2022년 대구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구분	공공기관 등								지하철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1호선	2호선	3호선
현황	20	20	20	17	27	34	17	14	32	29	30

출처: 대구시 홈페이지, 2022년 12월 기준

- 그러나 급속충전기 이용을 위한 안내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명시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적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